與野, 대치국면 장기화… '전세법·청문회' 처리 늦어지나

전세법, 네 차례 심사에도 지지부진
후쿠시마 시찰단 관련 갈등 고조
野 박민식 후보자 자진사퇴 주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 회원들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사각지대 없는'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이번 주에도 '대치' 국면을 이어갈 전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사부터 현안 질의, 인사청문회 정국이 이번 주중 이어지면서다. 야당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을 5월 임시국회 기간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한 부분도 뇌관 중 하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지원 관련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여야는 지난 1일, 3일, 15일, 16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법안 심사를 했으나 합의는 하지 못했다. 야당에서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여당이 반대하면서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적용 받는 보증금 범위 확대(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정부 비용부담 확대(기존 50%에서 70%) 등을 추가 대안으로 제시했다. 야당도 공공기관이 피해자 대신 경·공매로 보증금 회수 후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여야는 22일 소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정무위원회는 22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한다. 야당은 ▲이념 편향 ▲과거 주가조작 변호 이력 등을 이유로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하는 중이다. 청문회에서 여당은 논란을 방어하는 한편,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적합한 인재라는 점에 대해 부각하며 야당 공세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21일 기준 60일 이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현재로선 22~23일 예정된 소위원회를 거쳐 24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도 5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본회의 처리를 할 계획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야당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상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에 열리는 현안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외교 성과와 함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쟁점 법안 대치 국면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열리는 현안 질의인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與, 소상공인·예비군 지원 등 민생행보 속도

민생119 2차회의… 당 전달안 검토
주중 예비군 지원 방안 발표 예정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5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지도부 리스크'를 극복하고, 민생 현안 챙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당 특별위원회인 '민생119'는 21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택배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119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연다. 2차 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제1차 전체회의 당시 제안된 정책 과제인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 무료화 및 디지털화 ▲영세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지원책 ▲소액생계비대출 추가 지원 등에 대한 논의를 한다. 이어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할 대책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생119는 정부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한 뒤 에너지 비용에 대해 우려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만큼,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에너지 지원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신문고'에 국민들의 고충도 계속 접수하는 중이라고 민생119는 밝혔다. 지난 4월부터 20일간 접수된 민생 고충은 171건에 이른다. 분야별로 ▲생활안전(14건) ▲부동산(10건) ▲창업·취업(8건) ▲소상공인(8건) ▲교육(6건) ▲금융(2건) ▲출산·육아(2건) ▲기타(121건)이다.

민생119는 온라인 신문고에 민주노총 산하 택배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 강요 및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의 고충도 접수된 사실을 밝혔다. 민생119는 "택배 산업 현장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 민주노총 불법 활동으로 위기에 직면한 택배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민생119는 생업 현장 부담은 줄이고, 불법은 엄단해 '안심 민생'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포부도 밝혔다.

이 밖에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이번 주 2호 정책으로 '예비군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김기현 당 대표가 직접 주관·주재하고, 지도부 내 청년 인사인 김병민 최고위원,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등이 대거 참여하는 당내 청년 정책 컨트롤타워다.

1호 정책으로 '누구나 토익 5년'을 발표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이번 주 김기현 당 대표와 함께 예비군 훈련 현장에 방문, 2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호 정책에는 예비군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내 주요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불참 시 학생들의 출석 인정이 되지 않은 사례가 속출한 데 따른 대책인 것이다. 예비군 훈련장까지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한편, 훈련 수당 현실화 요구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 선출직 최고위원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달 9일 ARS와 결합한 온라인 방식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치른다.

/최영훈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점검 시찰단 日 출국

"과학적 기준으로 안전성 확인할 것"

"ALPS 농도 관련 원데이터요청"

후쿠시마 원전 전문가 현장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할 우리 정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시찰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방류 계획이 적절한지 전체적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들을 확인,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디에도 경도되지 않고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안전성을 계속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단장을 비롯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방사능 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후쿠시마에 파견된다.

시찰단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가 정화되고 바다로 방류되는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오염수 방류 전 단계에서 측정하고 저장하는 K4 탱크 군과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접근해 핵종 제거 설비 상태·구성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유 단장은 "ALPS를 중심으로 핵종 제거가 제대로 될 수 있는지, 방류 관련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체크할 것"이라며 "ALPS 시설 전후 농도 관련 원데이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존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과 관련해서는 "IAEA 검증팀에는 우리 전문가 한 분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시료 채취 검증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시료 3가지를 갖고 있고, 우리가 최인접국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의 별도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尹 대통령 "북한 위협·우크라 전쟁, 국제규범 정면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3에 참석해 자유토론 발언자로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평화안보, 법치,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제로 열린 세션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국제법과 규범에 입각한 법의 지배가 무시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유일한 길은 그 구성원인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사례는 국제규범과 법치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준다"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나라로서 자유 가치와 법치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에 G7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민주당

정무특보에 김영배 의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원내 신임 정무특보에 초선인 김영배(사진)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1일 신임 정무특보에 김영배 의원을 임명했다. 초선인 김 의원은 부산 출신으로, 지방정부 및 청와대, 국회 등을 모두 경험했다. 이번 인선은 소통 능력을 확장하겠다는 박 원내대표의 의지가 반영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8년간 성북구청장을 지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과 민정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0년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최고위원을 거쳤으며, 현재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의 야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내대표실도 김 의원이 정책 현안에 밝고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 당내 소통은 물론 지방정부, 시민사회, 학계 등과의 소통에도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태홍 기자 pth7285@